

데스크 시각

문화전당과 ‘정치의 덩어리’



윤 영 기 사회부장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을 위한 5차 공모가 지난 1월 무산됐다. 개관 이래 2년여 공백이 이어지고 있던 터라 지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전당장 공모를 무산시킨(?) 속사정이 미묘하다.

광주 지역에서는 전당장 공모와 관련해 이미 특정한 내정설이 돌았다. 이를 간파한 일부 시민 단체 인사들이 문화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등 반발 기류가 형성되자 해당 인사와 주변인물이 무마돼 나서면서 내정설은 사실상 굳어져 갔다. 권부(權府) 주변에서 그를 두둔하는 출처 불명 문건이 흘러나와 지역에까지 전파됐으니 불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이었다.

관바로 광주 민예총 등 진보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특정한 내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새 정부에서조차 ‘낙하산’이라며 선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도 또 다른 인사를 전당장으로

로 선임해야 한다는 문화예술단체의 울림 집회까지 열리는 등 혼탁 양상이 전개됐다. 결국 문화부는 ‘지역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5차 공모를 없던 일로 하고 말았다. 전당장 4차 공모까지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시킨 전례와 다른, 아주 이례적인 이유였다. 정부가 지역에 책임을 전가했지만, 공모 무산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새 정부의 기치인 공정과 정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야 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내정설 휘말린 문화원장

최근 아시아문화원장 공모가 시작됐다.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운영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엔 빠르게 될 문화원장은 본연의 업무 외에 그야말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정부조직)은 오는 2020년 현 아시아문화원과 합해될 운영이다. 이 법의 부칙에는 “문화재단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재단의 성과 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문에서는 ‘위탁’이지만 사실상 기관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시아문화

원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지위를 갖게 된다. 새로 뻗히게 될 문화원장의 임기(3년)가 바로 이와 맞물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광주민예총이나 광주민족예술인협회 같은 단체들이 잇달아 우려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마치 박근혜, 최순실 세력이 김종덕을 앞세워 문화전당을 유린했던 방식을 같은 담당자들이 반복하고 있다. 향간의 소문대로 촛불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이미 문화원장으로 내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표현이 거칠지만 역시 최근 무산된 전당장과 유사하게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오직을 좌지우지했음에도, 문화 기관 가운데 풍파가 덜했던 기관이 바로 문화전당이고 아시아문화원이다. 다행히도(?) 국정 농단 세력이 문화전당을 큰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은 덕분에 정치적 입김이 덜 작용했을 것이다. 역설이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짧은 경험으로 미뤄 봐도 정치적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선임되면 그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가 되고, 해당 기관은 정치적 대상이 된다. 정권의 부침에 연동해 휘둘리는 기관이 된다는 얘기다. 광주는 절절히 경험했지 않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전당을 노무현 정부의 사업

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하고 폄하했던 선례가 그것이다.

이전 정부 전철 밟지 않기를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놓여나 ‘문화 기관다운’ 문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전당은 대한민국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기관으로서 대접받아야 하고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문화전당이 산다. 그러나, 기우일지 모르지만 아시아문화원장 공모 과정을 보면서 나중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최순실·차은택 라인에 대응하고 싶었다가 사달이 난 콘텐츠진흥원장 말이다. 콘텐츠진흥원은 그 후유증과 상처, 실추된 이미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배웠던 교훈은 시기가 문제일 뿐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쓸쓸한 사실이었다.

아시아문화원장 공모 서류 접수가 지난 22일 마감됐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등을 거쳐 3배수 후보가 문화부에 추천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번 공모가 향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지금도 생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현실로 구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은편칼럼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심 명 섭 행정학 박사 효령노인복지타운 도서관장

2월의 마지막 날, 대학기도 졸업식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분주하게 움직인다. 통계청 자료를 검색해보니 실업자 3명 중 1명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로 나타난다. 대졸 실업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초로 30%대에 올라섰다. 즉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는 얘기다.

이렇듯 요즘 사회를 보면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도 해야 하지만 비혼족이라고 해서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도 늘고 있다. 또 홀로(YOLO)족

이라고 해서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현재를 중시해서 즐기며 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인생살불행’ (人生不幸福) 구절이 생각난다.

중국 송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던 정이 선생이 인생에는 삼불행(三不幸), 즉 세 가지의 불행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소년登高科’(少年登高科)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면, 즉 너무 이른 나이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게 되면 게을러지거나 나타태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석부모지세유미관’(席父母之勢爲美官)이다. 부모님 잘 만나서 집안 자체가 너무 좋은 것, 부모나 형제의 권세가 높은 것을 만난 것도 불행이다. 즉 고통이나 어려움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없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고재능문장’(有高能文章)이다. 뛰어난 어떤 재주나 문장력을 가진

것 또한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다. 요즘 말로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불행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최고인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언덕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을 막고자 한다면 비록 사회에 출몰이 늦을지라도 정이 선생의 이 속뜻을 늘 가슴에 품고 천천히 꾸벅꾸벅 걸으며 자기계발에 힘을 쓰고 덕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어미를 가나 타인에게 늘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없다”는 내려놓음의 진리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당연히 무거울 것이 없는 것인데도 어찌 보면 스스로 그 짐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고통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 보면 그만큼 무거운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왜냐하면 이 세상의 중심은 항상 자신이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다.

요즘 인생은 3모작이라고도 한다. 인생의 1모작을 잘 살았다고 해서 꼭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성공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것을 일찍 이루게 되면 후반에는 이룰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앞당기고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그것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생 끝까지 가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자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방향타를 잡고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빨리 더 높이 하는데, 누가 먼저 이루고 못 이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진정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위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가는 것에 시련이 없겠는가? 삶의 본질은 고통이고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社說

광주 시장 후보 전략공천설 왜 끊이지 않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시장 후보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전략 공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엔 조기 경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너무 일찍 달아오른 선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호남에서는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출마 예정자들 간 충돌은 단순히 신경전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극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관련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대통령 격려’ 발언 등으로 당내 후보들 간 신경전이 감·경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비해 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략공천설이 나온 배경은 바로 이러한 과열 분위기가 빚어낸 데다 ‘집안싸움’으로 인해 민

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앙당에서는 전략공천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 뛰어드는 7명의 후보를 모두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안과, 당원명부 유출과 ‘대통령 격려’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킨 일부 주자들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후보들로만 경선을 치르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 경선설 역시 과열된 선거 분위기로 인해 자칫 내상(內傷)만 깊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그러나 전략공천을 탈각시키지 않게 바란다. 전략 공천이란 원래 여성이나 소수자 배려 또는 새로운 인물의 진입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과연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략공천의 이유로 ‘과열 분위기 진정’을 내세우는 것은 명분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

지역 30년 구형 받은 박근혜 자업자득이다

국정 농단 사건의 최정절치자 한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민간인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맡겨 국가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유기 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 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불성실한 태도나 ‘정치 보복’ 등의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적법

한 사법 절차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점도 구형량을 가중시킨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는 최순실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도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이 구형량을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달 후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그보다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죄에 상응하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영화 ‘검사외전’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변호사 검사(황정민 분)에게 검사라는 호칭보다 영감이란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에게 나이에 어른이 영감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관객들이 보기에는 거북스러운 장면이다.

실생활에서도 판·검사에게 영감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2000년대 초반 법원·검찰을 출입할 때 민원인들이 판·검사를 향해 대가이나 영감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했다. 어쩔 때는 기자에게도 대가이나 영감이라 부르곤 했는데 민원 해결을 위한 야부성 호칭으로 이해했다.

조선 시대에는 정 2품 이상 판서(장관을 대감, 중 2품과 정3품 당상관(차관, 실장)을 영감이라고 불렀다. 이 호칭이 군수 등 하위 관직으로 확대되면서 경칭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다. 가장 광범위한 경칭은 선생님이다. 직업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란 호칭은 흔히 들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 들러 의사나 약사에게 선생님이 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14년 동안 인기리에 전파를 탔던

MBRC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은 중독성 강한 로고송으로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인기 가수가 직업 뒤에 호칭을 붙여 불렀는데 서민 청취 방송을 표방한 만큼 다양한 직업을 메들리 형식으로 엮었다.

“택시기사 아저씨 ~ 빵집 아저씨 ~ 떡집 아줌마 ~” 등 대다수 직업에 아저씨와 아줌마라는 호칭을 붙였다. 하지만 판사·의사 등 몇 개의 직업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영감님과 선생님

직업 뒤에 무심코 붙여 사용하던 호칭도 이제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2학년 통합 교과서에 등장하는 특정 직업에 대한 호칭이 편견과 고정 관념을 담고 있다며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교과서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소방관과 경찰관, 급식 조리원, 미용사 등은 ‘~아저씨’ ‘~아주머니’로 지칭한 데 반해 의사의 경우의 사 선생님이로 불러 문제가 됐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럼에도 호칭에 은근히 차별을 담아 사용하면, 듣는 이로서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기 고

5월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 영 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지난 2월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발표가 있고, 다음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공식 사과가 이어졌다. 그동안 이뤄지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이를 만에 이루어졌으므로도 특조위의 활동은 평가할 만하다.

특조위의 발표는 ‘5월 21일과 27일에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했고, 공군도 전투기와 공격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고 해병대도 출동을 대기했다. 또 1985년과 1988년에 각각 80위위원회와 국회대특특별위원회(511위원회)와 보안사의 511분석반)를 만들어 5·18자료를 수집하며 조작했다. 육해공군이 삼군 합동 작전을 전개했다.’ 등으로 요약된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발표 직후부터 여겨져 가시 불멘소리가 들린다. 어느 기자는 이 발표를 ‘소설’로까지 비판한다. 그 평가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몇 가지 점에서 특조위의 발표는 이전과는 다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많은 자료를 찾아냈다. 62만 여 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인용했다. 그동안 많은 조사(검찰 수사 포함)를 거쳐져 자료가 축적됐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그 중 군 자료는 그 특성에서 볼 때 민간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자료이다. 이 점만으로도 국방부 5·18특조위의 발표는 이전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또 그동안 집적하던 자료의 조작을 찾아냈다. 특조위는 그동안 시민들의 구술로만 떠돌던 헬기 사격을 사실로서 공표하며 그 성격을 비판했다. 동시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저질러진 군의 잘못된 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특히 국방부가 직접 인정, 사과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국방부 5·18특조위 발표를 통해 신군부 세력이 국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여줬다.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비판한 점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몇 가지 성과가 있음에도 국방부 5·18 특조위 발표는 앞으로의 과정을 던져준다. 역설적으로 왜 특별법과 특별조사위

위원회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특조위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제한된 시간과 권한, 한정된 과제 등은 이미 그 결과를 짐작케 했다. 무엇보다 특조위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처음부터 조사 주체를 한정시킴으로써 스스로 축제를 채운 격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돌아오지 않는 행방불명자, 입소문만 무성한 안매장지, ‘스모킹 건’이 없는 발포 명령자 등. 어쩌면 5·18의 핵심 쟁점에는 다가서지 못했다.

애초부터 특조위는 많은 한계를 안고 출범한 조직이다. 게다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던 탓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 거부를 강제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자료 검토와 증인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완결된 보고서를 보지 않고 보도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게 선부르다고 하겠지만, 특조위 보고서는 주장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핵심적인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 헬기 사격이 있었지만 이를 확정할 핵심 증인이나 결정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공군의 출동 대기와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은 자료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힘들다. 딱히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않다. 상부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현장 부대들이 이 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기

에는 평가가 부족하다. 또 많은 명령자들이 등장하지만 이들 모두 최종 명령권자가 될 수 없다. 인용된 자료도 문제다. 특조위의 발표에서는 80위위원회와 511위원회(분석반)의 자료 조작을 부각시키고 있다. 담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빈대 잡으려 투기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누가, 어떤 의도에서 자료를 조작 또는 멸시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결과만을 나열하고 있다.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밝혔는지 잘 읽히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래부터 ‘검검다라’기 될 수밖에 없는 기구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일 수도 있다. 특조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18의 진상 규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점에 서었다. 보다 강력한 권한과 안정적인 조직 구성, 그리고 ‘이제 다시!’의 마음으로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뒤 구성된 국가 기구의 조사에 따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5·18을 시비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바램일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남년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기자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전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